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2017.6.17 시행)>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2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3문항
제2편 정책론	4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1문항
제3편 조직론	5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2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3문항		

2017 지방직 9급 행정학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출제라면 90점 이상은 받아야지 좋은 점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로 출제된 정책문제의 구조화, 공무원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등도 모두 이론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학으로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기 때문이다(예산주의, 의결주의).

<예산과 법률의 비교(우리나라)>

구 분	예 산	법 률
① 제안권자	정부만이 제안권을 가짐	정부와 국회가 제안권을 가짐
②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한 없음
③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한 없음
④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⑤ 의결형식	예산안 형식으로 의결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
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⑦ 효력발생	국회의결로 확정되며 공포 불필요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
⑧ 구속력	국가기관만을 구속	국가기관·국민을 모두 구속

⑨ 시간적 효력	한시적 효력(1회계연도에 국한)	영속적 효력 발생
⑩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음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 2017 비전행정학 p.970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① 소비자안전규제
- ② 산업재해규제
- ③ 환경규제
- ④ 진입규제

정답> ④

해설> ④ [O] 진입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협의의) 경제적 규제이다.

①②③ [X]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규제 대상	· 개별 산업 · 기업의 본원적 활동 (설립·생산·판매·퇴출 등)	· 모든 산업 · 기업의 본원적 활동 (설립·생산·판매·퇴출 등)	· 모든 산업 · 기업의 사회적 행동(국민·소비자·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기업행동)
규제 성격	차별적·재량적	비차별적·비재량적	비차별적·비재량적
규제 목적	· 경쟁의 제한 (과당경쟁방지) · 자원보존, 산업육성 · 교차보조*의 필요성	· 경쟁의 촉진 (독과점적 횡포 방지) · 폭리·부당이득 방지 · 불공정한 가격차등 방지	· 시장경쟁과는 직접적 관련성 없음 · 삶의 질 확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보 ·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 례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제력집중 억제 등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등

* 교차보조 : 특정 기업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권을 부여한 후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퇴출규제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222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서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분업 내지는 전문화의 심화는 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분업이 심화되면 개인 또는 부서 간 의사소통이나 조정이 저해되어 할거주의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494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② [O] 소청(所請)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시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이다. 징계에 대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① [X]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③ [X]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 심사·처리)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심사·처리)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와 급여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918, 890, 891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② 환경영향평가
-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답> ②

해설>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X]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활동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②③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
	재평가	국무총리
	특정평가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합동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가 원칙	

▶ 2017 비전행정학 p.456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문제의 구조화는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구조화(W. Dunn)
<p>(1) 의 의</p> <p>① 정책문제의 구조화(problem structuring)는 ‘문제 상황의 대안적 개념화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여 문제를 명료화(구체화)하는 과정이다.</p> <p>②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p> <p>③ 잘 구조화된 문제의 해결은 분석가가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결과를 프로그램화 시켜 각</p>

상황에 맞추어 문제 해결)을 사용해도 좋으나,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는 문제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정의에 분석가가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2) 문제의 유형

- ① 구조화가 잘된 문제(정형화된 문제, well-structured problem) : 완전하게 전산화된 의사결정의 문제이므로 모든 정책대안의 모든 결과는 미리 프로그램화된다. 공공기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의 운영문제는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예이다.
- ②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된 문제(준정형화된 문제, moderately-structured problem) : 정책모의실험, 게임, 죄수의 딜레마 등이 그 예다.
- ③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비정형화된 문제, ill-structured problem) : 완전하게 비이행적인 (intransitive) 결정의 문제, 즉 기타 모든 대안에 우선하여 선호되는 유일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결정을 말한다.

(3) 구조화의 단계

던(W. Dunn)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등 4과정으로 제시하였다.

- ①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 문제 상황을 인식하거나 문제 상황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 ②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 상황으로부터 문제의 탐색에 관여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하나의 문제 발견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관련자들의 많은 문제 표현들을 발견하는 것
- ③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메타문제로부터 실질적 문제(substantive problem)로 이동하며, 분석가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하려고 시도함.
- ④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실질적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식적 문제(formal problem)로 구성한다. 실질적 문제를 공식적인 문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질적 문제의 공식적·수학적 표현(모형)으로 발전하게 됨.

▶ 2017 비전행정학 p.299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정답> ①

해설> ① [X]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불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응집력이 약해지고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세금(공적재원)을 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거의 없어서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2017 비전행정학 p.411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법률 제정은 국회(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행정기관(행정부처)이나 행정관료의 공식적인 역할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만,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338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애덤스(Adams)의 공정성(형평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① [O] 기대감(E)에 대한 설명이다.
- ② [O] 수단성(I)에 대한 설명이다.
- ③ [O] 유의성(V)에 대한 설명이다.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VIE이론	
1. 의 의	
(1) '욕구충족과 동기유발 사이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과정(지각과정)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며, 그 지각과정을	

통한 기대요인의 충족에 의해 동기 또는 근무의욕이 결정된다는 이론'

(2) 동기부여는 유의성(V) · 수단성(I) · 기대감(E)의 곱의 함수

II. 구성요소

(1) 기대감(Expectancy)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

(2) 수단성(Instrumentality)

특정한 수준의 성과(1차 산출)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3) 유의성(Valence)

보상(2차 산출)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능력·노력 ⇨ 성과(1차 산출) ⇨ 보상(2차 산출)

▶ 2017 비전행정학 p.518

[1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정답> ①

해설> ① [X]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보수제도		적용대상	보수구조					
			기본급여	성과급여(지급기준)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				
	성과급적 연봉제	5급(상당) 이상	기본연봉	성과연봉	최상20%	상위30%	하위40%	최하10%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 공무원단	기본연봉 (기준급+직무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매우미흡
호봉제		5급 미만	봉급 (직급과 근무연한)					

▶ 2017 비전행정학 p.818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속도(velocity)
- ② 다양성(variety)
- ③ 크기(volume)
- ④ 수동성(passivity)

정답> ④

해설>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 ④ [X] 수동성(passivity)은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②③ [O]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이다(3V).

빅데이터의 의의(새행정학2.0)
<p>(1) 개념</p> <p>①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p> <p>② 기존의 기업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제어 데이터 등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여기에 사진과 이미지처럼 그동안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p> <p>(2) 특징</p> <p>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으로 크기, 다양성, 속도를 꼽을 수 있다.</p> <p>① 크기(volume)</p> <p>크기(volume)는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를 말한다. 크기와 관련해서 기업 데이터, 웹 데이터, 센서 데이터에서 페타바이트(PB) 규모로 확장된 데이터가 등장하고 있다.</p> <p>② 다양성(variety)</p> <p>다양성(variety)은 데이터의 형태를 말한다. 기존 기업 데이터 환경에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에 저장된 데이터, 웹 로그(web log)나 기기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등과 같이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빅데이터는 이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p> <p>③ 속도(velocity)</p> <p>속도(velocity)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말한다.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p>

▶ 2017 비전행정학 p.705 / 2N2 서브노트 p.106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③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X] 분업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업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분담이나 작업과정에 따라 업무를 안정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 2017 비전행정학 p.493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 ① [X]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법 제48조 8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제48조(경영실적 평가)</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p>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601

[14]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설문의 내용은 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④ [X]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서 제외되었다(2014).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p>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p>

- 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4.1.1.>
-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988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정답> ②

해설> ② [X]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차기능조직은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기구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구분(Gilbert)>

구 분	내부통제(자율통제)	외부통제(민주통제)
공 식 (제도적)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 ¹⁾ 에 의한 통제,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등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통제 ²⁾ (행정감찰관제도)
비공식 (비제도적)	행정윤리의 확립(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행정문화 등	민중통제 (투표나 선거 등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등)

1)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을 통제작용과 관련하여 교차기능조직이라고 한다. 조직, 인사, 재무 등에 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이에 해당한다(예) 행자부, 인사처, 기재부, 법제처 등).

2) 우리나라의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2017 비전행정학 p.1146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X]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모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 2017 비전행정학 p.1294

[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X]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주체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행정자치부장관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40/100) - 행자부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50/100) - 국민안전처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 시 등 교부(10/100) - 행자부장관	[내국세 *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행정자치부장관 or 국민안전처장관

부동산 교부세	-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稅收)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중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안전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국민안전처장관

*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 중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 2017 비전행정학 p.1301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④ [X] 조직 배태성(embeddedness)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배태성(embeddedness)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규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태성은 제도적 동형화와 함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127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예산회계법」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답> ②

해설> ② [O]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정부기업(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되고,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2017 비전행정학 p.978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과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반대로 되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본다.

▶ 2017 비전행정학 p.796